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100대 건설사 절반 이상 위반

100대 건설사의 60%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재윤 의원(민주당)이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각각 제출받은 '건설사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100대 건설사의 작업현장 중 1곳 이상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와 겸직하도록 한 업체는 60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10대 건설사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

사업장별로 보면 2009년 5월 현재 100대 건설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2,311곳 가운데 13%에 이르는 300곳이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요원인데 건설 시공기술자와 겸직하게 하거나 아예 선임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건설재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는 안전관리자 불법선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현장 감리원 책임 강화

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원의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원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감리업무 수행지침서를 지난 10월 6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는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특히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 시에는 감리원을 입회토록 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토록 했다.

이울러 가시시설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시시설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진행 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그밖에도 감리원의 무단 현장 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 발주처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가 크게 부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모두 21건(사망자 25명, 부상자 4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자료는 드러난 것만 파악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사고와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타워크레인 사고의 1차 요인으로 타워크레인 등록현황을 꼽았다.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은 4,000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추정)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8월말 현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것은 89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등록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노후 장비를 들여와 페인트칠만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지금처럼 안전관리 없는 타워크레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라고 경고했다.

이울러 이 의원은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제재조치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07년 청주 하이닉스 공장 신축공사에서 타워크레인 붕괴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처벌은 벌금형과 5일간의 작업정지 처분에 불과했다"라며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관련 법령에 미비한 점이 많다"면서 "신호수 배치업무 등 안전관리 조치들을 명문화하고, 타워크레인 미등록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경전철 붕괴사고 '인재가 원인' 최종 결론

지난 7월 25일 발생한 의정부 경전철 공사장 붕괴사고는 관리자들의 감독 소홀과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사고원인 조사 결과 당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갠트리크레인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고 1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상판 조정 작업의 경우 크레인이 30t 무게의 엔드 세그먼트(상판 끝조각)를 교각위로 들어 올려 버팀대에 매달아 놓으면 작업자들이 소형운반장비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정확한 위치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수작업이 아닌 버팀대 좌우를 쇠사슬로 묶은 뒤 크레인만을 이용해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이와 같은 작업 뒤 크레인 및 버팀대를 묶은 쇠사슬 한쪽을 풀지 않은 채 크레인을 이동시키다 론칭거더 지지대와 부딪치며 구조물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침은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시공회사인 GS건설 측에 하달하고 보완조치를 명령했다.

한편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갠트리크레인을 운전한 조모(30)씨와 상판공사 하청업체 공사과장 최모(33)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공사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하청업체인 (주)CCL코리아 현장소장 류모씨(51)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강화해야”

최근의 높은 산재율을 타파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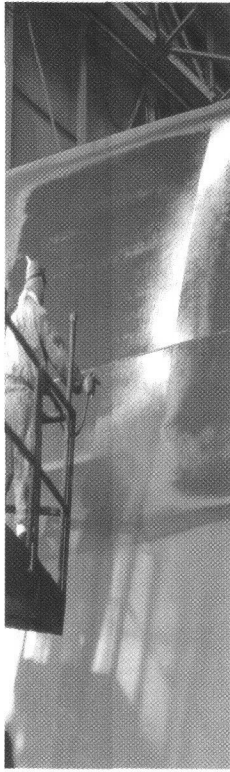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노위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율과 서비스업의 산재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제하며 “이러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현실적이고 실효성있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관리감독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가장 가깝게 지켜볼 수 있는 것이 반장 등의 관리감독자들”이라며 “이들의 교육을 강화시켜 그 교육내용을 실제 작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관리감독자들의 안전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관리감독자들을 교육에 참가시킨 사업주에게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민기 이사장은 “우리 공단



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교육 참여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노동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대 다발재해 위험수준 도달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3대 다발재해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의원(민주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재해 95,806건, 3대 다발재해 47,804건 등으로 지난 2007년(전체 재해 90,147건, 3대 다발재해 43,946건)에 비해 각각 6.3%, 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7월말 현재 전체 재해건수는 54,302명이었으며, 이중 추락, 전도, 협착 등의 3대 다발재해가 51.1%(27,750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이 되면 전체 재해자는 10만 명, 3대 다발재해건수는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다.

3대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3대 재해 사망자 비율은 07년 25.6%(616명), 08년 27.7%(671명), 09년 7월말 현재 31.6%(397명), 그리고 전체 산업재해 부상자 중 3대 재해 부상자 비율은 07년 49.3%(43,330명), 08년 51.2%(47,804명), 09년 7월말 현재 52.3%(27,750명) 등으로 사망자 및 부상자수 모두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울러 김 의원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 사고 다발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강화, 사업장별 심층 분석을 통한 교육·재정·기술 지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충원 및 재배치 등 특단의 재해예방 개선대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